

文대통령 “청년 고용 위한 자원대책 필요”

“청년 일자리 추경 불가피... 민간 고용시장 활성화 중점... 문제 해결 위한 4가지 정부 대책 소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고용 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국회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 일자리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엔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장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통상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

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고용 질적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청년들은 고용질에 아우성인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4가지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둘째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과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 등 할 수 있게 선취업 후 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입당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대열에 공식 합류했다.



이현웅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김윤덕 도당위원장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이 예비후보는 25년 공직생활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행정공직자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나름대로 5년 동안 학계와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경선에서 여유있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인지도와 관련해서도 이 예비후보는 “자신감을 갖고서 권리당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과의 접촉과 교통량이 많은 길거리 인사 등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심상정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말고 제안만 해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 발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우군 격인 정의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대통령의 헌법개정제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안이 국회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이 정부 하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개헌안 협상의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다. 심 의원은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갖지는 않되,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대통령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약속했다.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라도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한다. 여당은 아직 이 방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조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개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제도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10인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직 당론”이라면서도 “국회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논의하면) 협력할 수 있다”고 여지를 줬다. /뉴시스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손잡으며 반전 계기 마련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존재감 부각... 차기 대권 주자 부재 · 광역단체장 당선자 배출해야

지난 달 6일 출범한 민주평화당은 창당 1개월을 넘기면서 2차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다. 국민의당에서 대거 이탈해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 했지만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정당으로 전략한 채 출범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평화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리얼미터가 12일 CBS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8.1%, 자유한국당은 19.2%, 바른미래당은 8.4%였다.

이어 의석 수가 적은 정의당이 5.2%로 민주평화당(2.6%)보다 우위를 나타냈다. 여기에다 텃밭인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크

게 밀리며 미미한 지지율을 보였다. (19세 이상 유권자 5만101명에게 통화를 시도, 2502명이 답을 해 5.0%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호남에서마저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평화당이지만 이전 반전을 피할 계기가 마련됐다. 정의당과 손잡기로 하면서 원내 제4당으로, 지방선거에서는 당당히 기호 4번 깃발을 들고 다른 정당과 자웅을 겨뤄 불만찬 여건이 갖춰진 것이다.

당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엿보인다. 실질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뒤집고 원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

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호남에서도 지역기반 정당이 있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내부 분석이다. ‘호남 자민련’이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임에는 틀림없고 평화당이 존재해야 이른바 ‘호남 홀대’ 없이 혜택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논리가 유권자 사이에서 먹혀 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적 색채를 띤 정의당과 합세함으로써 호남이 진보 분야의 주도권을 잡는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효과다.

이와 관련 평화당의 한 관계자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개헌 논의에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평화·평등·개혁이라는 우리

당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 국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안정책을 선보이면 지방선거에서 보다 강한 지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평화당이 수권정당으로 모양새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전폭적 지지를 얻었던 이유는 민주당보다 한걸음 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을 향했다는 점과 그 중심에 안철수라는 대신 후보가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지금의 평화당에서 이같은 유력 주자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선포 긍정적인 답을 내놓긴 어렵다. 때문에 평화당이 아무리 호남을 텃밭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전국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다수 배출하지 못한다면 그 때는 당의 존립마저 걱정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